

이슈브리프



- 2013년 가정폭력 실태조사를 통해 본 자녀학대 실태
황정임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동학대 관련 법령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강동욱 |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2013년 가정폭력 실태조사를 통해 본 자녀학대 실태¹⁾

황 정 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 들어가며

최근 들어 언론을 통해 아동학대사건이 계속해서 보도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정책적 관심이 높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발간한 2014 전국아동학대현황 보고서²⁾에 따르면 2001년 4,133건에서 2014년 17,782건으로 약 4.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아동보호전문기관, 2014:250). 아동학대는 가족 안에서 발생하는 폭력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자녀양육과정에서의 훈육이라는 이름 아래 용인 혹은 묵인되어 왔던 측면이 있다. 홍나미(2015)에 따르면, 아동학대나 부모에 의해,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서 공식적으로 보고되지 않을 뿐 아니라 발견하는 것조차 쉽지 않고, 이런 점을 고려하면 실제 일어난 아동학대 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2에 의거하여 3년에 한번 씩 가정폭력 실태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2007년, 2010년, 2013년에 이어 올해도 조사가 진행될 예정에 있다. 가정폭력 실태조사는 우리사회의 가정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예방, 방지하는 정책 수립에 활용함을 목적으로, 부부폭력 뿐 아니라 배우자를 제외한 부모, 형제자매 등에 의한 가족원 폭력, 노부모학대 등 가족 내 폭력피해를 포괄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여기

1) 본 글에서 인용된 조사결과 부분은 여성가족부의 용역과제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2013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보고서」(연구책임 : 황정임) 내용의 일부를 요약 정리하였다.

2)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매해 전국 아동학대 현황 보고서를 발간하는데, 이는 전국에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아동학대사례가 신고 접수된 이후,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를 바탕으로 발간된다(보건복지부·아동보호전문기관, 2014:50)

에 자녀학대도 가족원폭력에 포함되어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그간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는 주로 부부폭력과 관련하여 인용되거나 활용되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신고접수에 의한 통계자료 이외의 자료를 통해 자녀학대 실태를 엿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2013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보고서에 수록된 자녀학대 관련 문항의 조사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2. 2013년 가정폭력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자녀학대

가정폭력 실태조사에서 파악된 자녀학대(자녀폭

력) 조사결과는 본 조사에 응답한 만19세 이상의 기혼자(사실혼 포함) 중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1,380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것이다. 전체 응답자 중 ‘응답자가 자녀에게’ 지난 1년간 학대한 경우는 46.1%, ‘응답자의 배우자가 자녀에게’ 학대한 경우는 31.3%로 나타났다. 자녀폭력 유형별로는, ‘응답자가 자녀에게’ 행한 폭력 중 정서적 폭력이 가장 많았다. 42.8%였고, 그 다음은 신체적 폭력(경한+중한)으로 18.3%였다. ‘응답자의 배우자가 자녀에게’ 행한 경우도 정서적 폭력(28.8%), 신체적 폭력(경한+중한)(10.1%) 순이었다.

〈표 1〉 지난 1년간 자녀폭력 발생률(전체)

(단위: %(명))

구분	자녀폭력 발생률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방임	(분석대상수)
		경한 폭력	중한 폭력	(경한+중한 폭력)			
내가 자녀에게	46.1	17.5	4.8	18.3	42.8	5.0	(1,380)
배우자가 자녀에게	31.3	9.8	2.6	10.1	28.8	3.8	(1,333)

주: 1) 백분율 및 빈도수는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된 값

2) 자녀폭력 발생률은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방임 행위를 포함

3) 신체적 폭력 중 경한 폭력은 ‘허리띠(벨트), 막대기 등으로 엉덩이 때렸다’, ‘손바닥으로 뺨이나 머리를 때렸다’, ‘자녀를 잡고 던지거나 넘어뜨렸다’에 해당하며, 중한 폭력은 ‘주먹이나 발로 세게 때렸다’, ‘사정없이 때렸다’, ‘목을 졸랐다’, ‘고의적으로 화상을 입혔다’, ‘칼, 가위 등으로 위협했다’에 해당함

4) 정서적 폭력은 ‘때리겠다고 위협했다’, ‘욕설을 퍼붓거나 악담을 했다’에 해당하며, 방임은 ‘자녀의 식사를 제 때에 잘 챙겨주지 않았다’, ‘치료가 필요할 때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았다’, ‘술이나 약물에 취해서 자녀를 돌보지 않았다’, ‘어른과 함께 있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혼자 있게 하였다’에 해당함

출처: 황정임 외(2013:133)

응답자 성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여성이 응답한 경우 ‘응답자가 자녀에게’ 행한 자녀폭력 발생률은 48.8%였고, 폭력유형별로는 정서적 폭력이 45.6%로 월등히 높았고 신체적 폭력(경한+중한) 19.2%, 방임 5.9%순이었다. 남성이 응답한 경우 ‘응답자가 자녀에게’ 행한 자녀폭력 발생률은

42.8%였다. 폭력유형별로는 정서적 폭력이 39.6%, 신체적 폭력(경한+중한) 17.3%, 방임 3.9%순이었다. 2014 전국아동학대현황 보고서(p.259)에 따른 학대사례유형별 경향(중복학대 미분류의 경우 정서학대 40.0%, 신체학대 36.9%, 방임 20.3%, 성학대 2.9%)과 비교해 볼 때, 아동

학대사례로 신고 접수된 경우 신체학대와 정서학대가 둘다 높게 발생하고 있는데 반해, 가정폭력 실태 조사의 경우 정서적 폭력 비율은 유사하고 신체적 폭력 비율은 낮았다.

〈표 2〉 지난 1년간 자녀폭력 발생률(여성, 남성)

(단위: %(명))

구분	자녀폭력 발생률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방임	(분석대상수)
		경한 폭력	중한 폭력	(경란+중한 폭력)			
여성응답	내가 자녀에게	48.8	18.3	4.8	19.2	45.6	5.9 (735)
	배우자가 자녀에게	29.2	9.5	2.3	10.2	26.6	3.8 (714)
남성응답	내가 자녀에게	42.8	16.7	5.0	17.3	39.6	3.9 (644)
	배우자가 자녀에게	33.6	10.0	3.0	10.0	31.3	3.9 (619)

주: 1) 백분율 및 빈도수는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된 값

2) 자녀폭력 발생률은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방임 행위를 포함

3) 신체적 폭력 중 경한 폭력은 '허리띠(벨트), 막대기 등으로 엉덩이 때렸다', '손바닥으로 뺨이나 머리를 때렸다', '자녀를 잡고 던지거나 넘어뜨렸다'에 해당하며, 중한 폭력은 '주먹이나 발로 세게 때렸다', '사정없이 때렸다', '목을 졸랐다', '고의적으로 화상을 입혔다', '칼, 가위 등으로 위협했다'에 해당함

4) 정서적 폭력은 '때리겠다고 위협했다', '욕설을 퍼붓거나 악담을 했다'에 해당하며, 방임은 '자녀의 식사를 제 때에 잘 챙겨주지 않았다', '치료가 필요할 때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았다', '술이나 약물에 취해서 자녀를 돌보지 않았다', '어른과 함께 있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혼자 있게 하였다'에 해당함

출처: 황정임 외(2013:134)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 살펴본 결과, 전체 응답자의 경우, 경한 신체적 폭력에서는 '손바닥으로 뺨이나 머리를 때렸다'는 응답이 12.4%로 가장 많았다. 중한 신체적 폭력에서는 '자녀를 주먹이나 발로 세게 때렸다'는 응답이 3.2%로, 정서적 폭력에서는 '자녀를 때리겠다고 위협했다'는 응답이 40.2%로 가장 많았다. 방임에서는 '자녀의 식사를 제때에 잘 챙겨주지 않았다' 3.6%, '어른과 함께 있어야하는 상황에도 혼자 있게 했다' 3.2% 순이었다. 배우자의 경우도 경향은 유사했는데, 상대적으로 응답자 본인에 의한 폭력발생 비율보다 적은것으로 응답했다.

성별에 따라 살펴본 결과, 여성이 '내가 자녀에 대해' 폭력행위를 했는지에 대해 응답한 결과를 보

면, 경한 신체적 폭력에서는 '손바닥으로 뺨이나 머리를 때렸다'는 응답이 13.4%, 중한 신체적 폭력에서는 '자녀를 사정없이 때렸다'는 응답이 3.3%였다. 정서적 폭력에서는 '자녀를 때리겠다고 위협했다'는 응답이 42.6%, 방임에서는 '식사를 제때에 잘 챙겨주지 않았다'는 응답이 4.3%로 나타났다. 남성이 '내가 자녀에 대해' 폭력행위를 했는지에 대해 응답한 결과에서는, 경한 신체적 폭력 중 '손바닥으로 뺨이나 머리를 때렸다'가 11.4%로, 중한 신체적 폭력 중 '주먹이나 발로 세게 때렸다'가 3.7%였다. 정서적 폭력 중 '자녀를 때리겠다고 위협했다'가 37.4%로, 방임 중 '어른과 함께 있어야하는 상황에도 혼자 있게 했다'가 3.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여성과 남성 모두 경한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폭력행위는 동일했고, 중한 신체적 폭력이나 방임에서는 다르게 나타났다. 정서적 폭력의 경우 여성은 ‘때리겠다고 위협한 행위’, 남성은 ‘주먹이나 발로 세게 때린 행위’로 차이를 보였다. 방임의 경우 여성은 ‘식사를 챙겨주지 않는 행위’를, 남성은 ‘어른과 함께 있어야 하는 상황에서 혼자 있게 하는 행위’로 달리 나타났다. 배우자에 대한 응답에서는 여성응답자에 비해 남성응답자에서 본인의 배우자가 자녀에 대해 폭력행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표 3〉 자녀폭력 행위자 및 유형별 발생 실태

(단위: %(명))

행위자	폭력행위	전체			여성			남성		
		있다	없다	계	있다	없다	계	있다	없다	계
내가 자녀에게	경한 신체적 폭력									
	허리띠(벨트), 막대기 등으로 엉덩이를 때렸다	8.9	91.1	100.0 (1,380)	8.9	91.1	100.0 (735)	8.9	91.1	100.0 (644)
	손바닥으로 뺨이나 머리를 때렸다	12.4	87.6	100.0 (1,380)	13.4	86.6	100.0 (735)	11.4	88.6	100.0 (644)
	자녀를 잡고 던지거나 넘어뜨렸다	2.5	97.5	100.0 (1,380)	2.1	97.9	100.0 (735)	2.9	97.1	100.0 (644)
	중한 신체적 폭력									
	주먹이나 발로 세게 때렸다	3.2	96.8	100.0 (1,380)	2.7	97.3	100.0 (735)	3.7	96.3	100.0 (644)
	사정없이 때렸다	2.7	97.3	100.0 (1,380)	3.3	96.7	100.0 (735)	2.1	97.9	100.0 (644)
	목을 졸랐다	0.9	99.1	100.0 (1,380)	0.8	99.2	100.0 (735)	1.1	98.9	100.0 (644)
	고의적으로 화상을 입혔다	0.8	99.2	100.0 (1,380)	0.8	99.2	100.0 (735)	0.8	99.2	100.0 (644)
	칼, 가위 등으로 위협했다	0.7	99.3	100.0 (1,380)	0.9	99.1	100.0 (735)	0.6	99.4	100.0 (644)
	정서적 폭력									
	때리겠다고 위협했다	40.2	59.8	100.0 (1,380)	42.6	57.4	100.0 (735)	37.4	62.6	100.0 (644)
	욕설을 퍼붓거나 악담을 했다	17.5	82.5	100.0 (1,380)	20.0	80.0	100.0 (735)	14.6	85.4	100.0 (644)
	방임									
	자녀의 식사를 제때에 잘 챙겨주지 않았다	3.6	96.4	100.0 (1,380)	4.3	95.7	100.0 (735)	2.8	97.2	100.0 (644)
	치료가 필요할 때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았다	1.3	99.7	100.0 (1,380)	1.3	98.7	100.0 (735)	1.4	98.6	100.0 (644)
	술이나 약물에 취해서 자녀를 돌보지 않았다	1.1	98.9	100.0 (1,380)	1.0	99.0	100.0 (735)	1.2	98.8	100.0 (644)
	어른과 함께 있어야 하는 상황에도 혼자 있게 하였다	3.2	96.8	100.0 (1,380)	3.4	96.6	100.0 (735)	3.1	96.9	100.0 (644)
배우자가 자녀에게	경한 신체적 폭력									
	허리띠(벨트), 막대기 등으로 엉덩이를 때렸다	5.8	94.2	100.0 (1,333)	5.4	94.6	100.0 (714)	6.3	93.7	100.0 (619)

〈표 계속〉

행위자	폭력행위	전체			여성			남성		
		있다	없다	계	있다	없다	계	있다	없다	계
	손바닥으로 뺨이나 머리를 때렸다	7.1	92.9	100.0 (1,333)	6.8	93.2	100.0 (714)	7.4	92.6	100.0 (619)
	자녀를 잡고 던지거나 넘어뜨렸다	2.1	97.9	100.0 (1,333)	1.6	98.4	100.0 (714)	2.7	97.3	100.0 (619)
중한 신체적 폭력										
	주먹이나 발로 세계 때렸다	2.3	97.7	100.0 (1,333)	1.7	98.3	100.0 (714)	3.1	96.9	100.0 (619)
	사정없이 때렸다	2.0	98.0	100.0 (1,333)	1.7	98.3	100.0 (714)	2.5	97.5	100.0 (619)
	목을 졸랐다	1.2	98.8	100.0 (1,333)	0.8	99.2	100.0 (714)	1.7	98.3	100.0 (619)
	고의적으로 화상을 입혔다	1.1	98.9	100.0 (1,333)	0.8	99.2	100.0 (714)	1.4	98.6	100.0 (619)
	칼, 가위 등으로 위협했다	1.0	99.0	100.0 (1,333)	0.8	99.2	100.0 (714)	1.2	98.8	100.0 (619)
정서적 폭력										
	때리겠다고 위협했다	27.7	72.3	100.0 (1,333)	26.0	74.0	100.0 (714)	29.6	70.4	100.0 (619)
	욕설을 퍼붓거나 악담을 했다	11.1	88.9	100.0 (1,333)	9.8	90.2	100.0 (714)	12.6	87.4	100.0 (619)
방임										
	자녀의 식사를 제때에 잘 챙겨주지 않았다	2.9	97.1	100.0 (1,333)	2.6	97.4	100.0 (714)	3.2	96.8	100.0 (619)
	치료가 필요할 때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았다	1.4	98.6	100.0 (1,333)	1.1	98.9	100.0 (714)	1.8	98.2	100.0 (619)
	술이나 약물에 취해서 자녀를 돌보지 않았다	1.7	98.3	100.0 (1,333)	1.7	98.3	100.0 (714)	1.8	98.2	100.0 (619)
	어른과 함께 있어야하는 상황에도 혼자 있게 하였다	2.9	97.1	100.0 (1,333)	2.6	97.4	100.0 (714)	3.2	96.8	100.0 (619)

주: 1) 백분율 및 빈도수는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한 값

2) 분석에서 무응답을 제외

출처 : 황정임 외(2013:136~1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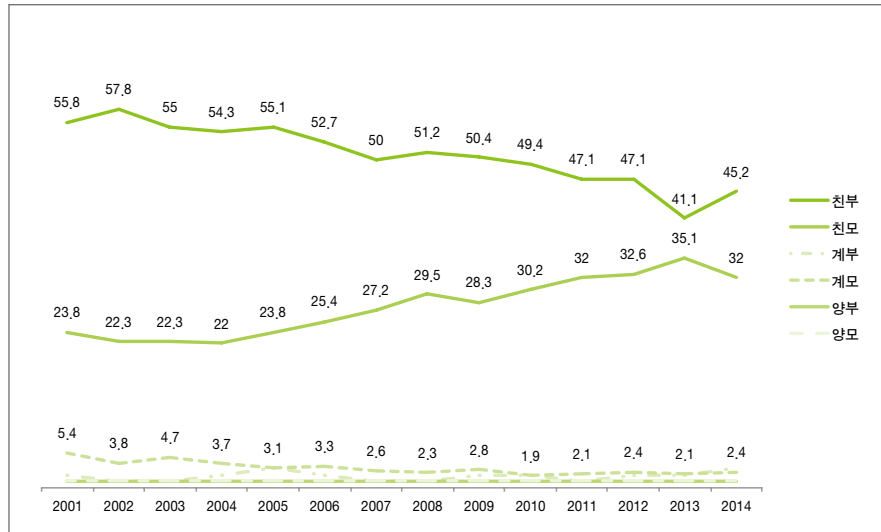
3. 나가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정폭력 실태조사에서 조사응답자가 자녀폭력을 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46.1%였고, 폭력유형으로는 정서적 폭력 발생율(42.8%)이 월등히 높아서 전체 응답자 기준으로 신체적 폭력(18.3%) 보다 약 2.3배 정도 높았다. 2014 전국아동학대현황 보고서에서 나타난 학대사례유형별 경향(중복학대 미분류의 경우 정

서학대 40.0%, 신체학대 36.9%, 방임 20.3%, 성학대 2.9%)과 비교해 볼 때,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에서는 정서적 폭력 비율은 유사하고 신체적 폭력 비율은 낮았다.

가정폭력 실태조사에서는 근소하지만 여성의 자녀폭력 발생율이 남성 보다 높게 나타났다. 여성이 응답한 경우 ‘응답자가 자녀에게’ 행한 자녀폭력 발생율은 48.8%였고, 남성이 응답한 경우는 42.8%였다. 여성과 남성 응답 모두 정서적 폭력

발생율이 높아서 여성 45.6%, 남성 39.6%였다(신체적 폭력(경한+중한) 여성 19.2%, 남성 17.3%). 이는 2014 전국아동학대현황 보고서(p.260)에서, 연도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중 친부의 비율이 45.2%, 친모의 비율이 32%로 나타난 것과는 차이가 나는 수치이다. 그러나 2001년부터 추이를 살펴보면, 친부 비율은 다소 감소하고 있고, 친모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³⁾.



출처: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전문기관(2014: 260)

[그림 1] 연도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이러한 차이는 신고접수와 서베이라는 산출방법의 차이와 관련된 것일 수도 있고, 같은 서베이 방식에서도 차이가 나타나고 있어서⁴⁾ 자녀학대 행위자와 피해아동간의 관계에 대해선 보다 다양하게 검토 분석되고 논의되어야 한다. 2014 전국아동학대현황 보고서(p.121)에 제시된 학대행위자 특성을 살펴보면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 33.1%,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 20.4%, 부부 및 가족갈등 10.0% 순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현재는 학대행위자라고 통칭되어서 논의되고 있으며, 학대행위자 특성을 학대의 원인과 연결지어서 양육태도 및 방법을 습득하는데 초점을 둔 부모교육이 강조되는 맥락도 이와 연결되는 것으로 보인다.

3) 계모는 감소세를 보이는 반면 계부, 양부와 양모의 경우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4) 아동종합실태조사(2013)에서는 아동과 보호자 모두를 대상으로 가족이나 주양육자의 아동에 대한 학대실태를 조사하였는데, 보호자 대상의 응답결과에서 평균 0.01~0.07 수준을 나타내어 '전혀 없었다'에 가까운 응답결과를 보였고, 성별, 연령별, 소득수준별 지역별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기술하고 있다. 정서학대에서 여성은 0.06, 남성은 0.04였다.

자녀학대 행위자가 남성(아버지)이든 여성(어머니)이든간에 부모에 의한 자녀학대는 용인되어선 안된다. 그러나 젠더관점에서 보다 면밀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 우리사회는 성별고정관념과 역할구조하에서 자녀에 대한 돌봄부담이 거의 전적으로 여성에게 부여되고 있다. 모성은 누구나 갖고 있고 갖고 있어야 하는 것으로 여기면서 ‘어떻게 엄마가 저럴 수 있을까’라는 시선이 존재하고, 남성(아버지) 보다 심한 도덕적인 비난에 이를 수도 있다. 예컨대 전적으로 자녀의 양육, 교육, 일상생활지도 등에 여성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고려가 없이 여성(어머니)의 돌봄부담에 대한 완화 등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거나, 남성이 상대적으로 돌봄자의 역할을 덜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학대 발생율이 높다는 것에 대해 문제 제기하는 걸 간과할 수 있다.

여러 연구들에서 아동학대와 아내학대가 중복적으로 발생하거나 아동학대 유발 요인 중 하나인 부부폭력과 관련성을 제기하고 있다(김갑숙, 1991, 신영화, 1986, 소속희, 1986, 김재엽,

2001:4-5에서 재인용). 정혜숙(2009)은 아내학대와 아동학대가 중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학대당한 아내는 피해자 비난과 모성 비난 두가지를 직면하면서 본인도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지원과 도움을 제공받지 못하게 됨을 지적하고 있다. 김재엽(2001:6)에 따르면, 아동학대 가해자로서 어머니가 많은 이유에 대해, 자녀의 교육에 대한 책임이 우선적으로 어머니에게 있으며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자녀와 보내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많다는 점으로, 아버지가 많은 이유에 대해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공격적이고 사회적으로 남성의 폭력이 보다 허용적이라는 점으로 해외 연구결과를 인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부모에 의한 자녀학대는 근절되어야 한다.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드러나지 않은 사건은 발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아동 개인에 대한 보호뿐 아니라 아동을 둘러싼 가족, 무엇보다 가족 안에서 부모로서의 여성과 남성이 수행하고 있는 역할과 부담, 이와 관련된 문화와 인식 등도 고려하는 보다 종합적인 접근과 분석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김미숙·전진아·하태정·김효진·오미애·정은희·최은진·이봉주·김선숙.(2013). 「아동종합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재엽.(2001). “부부폭력과 아동학대”, 「연세사회복지연구」. vol6-7, pp.1-32
- 보건복지부·아동보호전문기관.(2014). 「2014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 안성경·양지혜·정익중.(2012). “아동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영역의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에 관한 메타분석”, 「한국가족복지학」, vol.38, pp.331-358
- 정혜숙.(2009). “아내학대와 아동학대의 중복발생을 둘러싼 여성주의비판모델과 여성복지적 과제의 검토”, 「한국여성학」, 제25권4호, pp.109-139
- 홍나미.(2015). “생명경시 현상과 부모-부모의 아동학대를 중심으로”, 인간과 사랑 생명존중 실천 학술세미나 주제발표문, pp.39-60
- 황정임·장혜경·윤덕경·김영란·주재선·김동식·이인선·정수연·정춘숙·김은경.(2013). 「2013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아동학대 관련 법령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강 동 욱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1. 머리말

최근 우리 사회에서 학대로 인한 아동의 피해가 우려할 만한 정도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정부와 사회의 대처가 강화되고 있다. 이것은 그동안 아동학대에 대한 대처에 있어서 아동복지적 관점에서 접근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아동의 ‘원가정 보호’에 치중한 나머지 학대행위가 가정 내부의 문제 또는 아동훈육의 문제로 취급하면서 이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자제하고, 학대행위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는 경우에도 비교적 경미하게 처벌하여 왔던 기존의 관행으로부터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변화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2341호, 2014.1.28. 제정. 이하 ‘아동학대범죄처벌법’이라 한다)의 제정과 이에 부수한 「아동복지법」 개정(법률 제12361호, 2014.1.28. 일부개정)을 통해 법적으로 뒷받침하기에 이르렀다. 아동학대범죄처벌법에서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민·형사처벌을 강화하고, 신고의무자의 신고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여러 장치를 강구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본고에서는 아동학대범죄처벌법을 중심으로 아동학대범죄사건처리에 대한 법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2. 아동학대범죄처벌법의 개관

아동학대범죄처벌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절차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함을 목적(제1조)으로 한 것으로서 총 6장 전문 64개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부분(제4조-제9조)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리에 대한 사법절차’에 관한 부분(제10조-제58조) 등, 2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동법에서는 ‘아동학대범죄’(제2조 제4호)라는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아동학대가 ‘범죄’이고, 따라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범죄에 대해 형사처벌 가중규정을 두는 한편, 가정의 회복을 통한 원가정보호를 실현하기 위하여 아동학대보호사건 처리절차를 마련하고, 피해아동의 보호장치를 강화하였다. 따라서 동법은 「아동복지법」의 특별법이라고 하기 보다는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특별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한편, 아동학대범죄처벌법에서는 아동학대범죄가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범죄처벌법’이라 한다)이 아니라 동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되, 성학대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범죄처벌법’이라 한다)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제3조).

3. 아동학대범죄의 신설 및 그 처벌의 강화

1) 아동학대범죄의 주체와 대상의 한정

아동학대범죄처벌법에서는 ‘아동’, ‘보호자’, ‘아

동학대’의 개념은 「아동복지법」의 개념을 그대로 준용하되, 동법의 적용대상인 아동학대범죄를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제2조 제4호)로 한정함으로써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한 아동학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아동복지법」의 경우와 달리 하고 있다. 따라서 동법상 아동보호사건이나 피해아동보호명령의 대상도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 제한된다.

또 동법에서는 학대행위자는 ‘아동학대범죄를 직접 범한 자와 그 공범’(제2조 제5호)로 정의하고, 피해아동도 ‘아동학대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아동’(제2조 제6호)으로 한정하여 그 처벌대상을 명확히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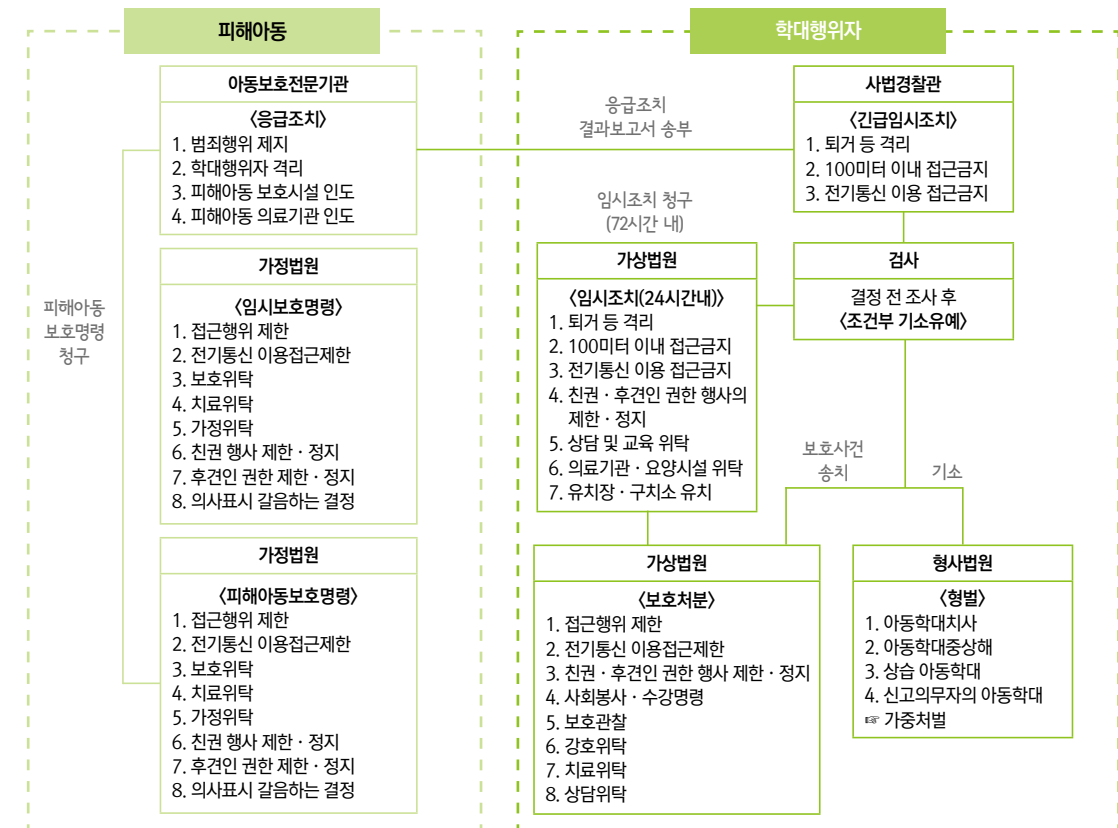
2) 아동학대범죄의 가중처벌과 새로운 제재의 도입

아동학대범죄처벌법에서는 먼저 아동학대치사와 아동학대중상해죄를 신설하여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즉,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제4조),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였다(제5조). 둘째, 상습적으로 소정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자(제6조)는 물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하고 있다(제7조). 셋째, 학대행위자에게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학대행위자의 교화·개선을 위해 200시간의 범위에서 수강명령 또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8조 제1항). 이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1. 아동학대 행동의 진단·상담, 2. 보호자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게 하기 위한 교육, 3. 그 밖에 학대행위자의 재범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그 내용으로 한다(동조 제6항)¹⁾. 넷째, 학대행위자에 대한 검사의 친권상실청구제도를 도입하였다. 학대행위자가 아동학대중상해(제5조) 또는 아동학대상습범(제6조)의 범죄를 저지른 때에는 친권상실의 선고 또는 후견인의 변경 심판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검사는 그 사건의 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에 법원에 「민법」 제924조의 친권상실의 선고 또는 같은 법 제940조의 후견인의 변경 심판을 청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제9조 제1항).

4. 아동학대범죄의 처리절차상 특례

아동학대범죄처벌법에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조사·심리에 있어서는 성폭력범죄처벌법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을 준용하도록 하고(제17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리절차(제4장, 제5장)에 있어서는 가정폭력범죄처벌법과 유사한 입법형식을 갖추고, 아동보호사건의 조사·심리·보호처분 및 민사처리에 관한 특례 등에 대하여는 가정폭력범죄처벌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제44조). 동법의 제정에 따른 아동학대범죄사건의 처리절차를 그림으로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아동학대범죄처벌법에 따른 아동학대사건 처리 흐름도

1) 아동학대 신고의무의 강화

아동학대범죄처벌법에서는 먼저, 아동학대신고 의무자 및 신고사유를 확대하였다. 동법 제10조에서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에 대해 규정하면서 종전 「아동복지법」 제25조에서 규정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외에 '23.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와 '24.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 수행인력'을 추가하고, 신고사유도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 외에 '아동학대의 의심이 있는 경우'로 확대함으로써 아동학대발생시 초기개입을 용이하게 하였다. 둘째,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를 활성화하기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제63조 제1항 제4호)으로써 처벌을 강화하였다.

2) 현장조사제도의 개선 등

아동학대범죄처벌법에서는 먼저 아동학대범죄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원활한 현장조사를 위하여 아동학대범죄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지체 없이 아동학대범죄의 현장에 출동하도록 강제하고, 이때 수사기관의 장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서로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의 장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사법경찰관이나 그 소속 직원이 아동학대범죄 현장에 동행하도록 하고 있다(제11조 제1항). 또 동법에서는 출동한 사법경찰

관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으로 하여금 아동학대범죄가 행하여지고 있는 것으로 신고된 현장에 출입하여 아동 또는 학대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권한을 부여하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범위에서만 학대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 또는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동조 제2항).

그리고 현장조사의 원활과 조사자의 안전보호를 위해 누구든지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에 폭행·협박이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그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동조 제3항),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61조).

3) 응급조치와 긴급임시조치 및 임시조치 제도의 도입

아동학대범죄처벌법에서는 아동학대가 발생한 경우에 사법절차의 진행과정에서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사법경찰관 뿐만 아니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에게 응급조치(제12조), 긴급임시조치(제13조) 및 임시조치(제19조)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것들은 가정폭력범죄처벌법상 가정폭력범죄의 처리에 관한 절차(제8조 이하)를 참고로 하여 입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아동학대범죄의 특성상 청구권자를 '사법경찰관과 피해아동 및 그 법정대리인' 외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장 또는 피해자변호사'에게 까지 확대인정하고 있다. 특히, 동법에서 임시조치

1) 수감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실행(實刑)을 선고할 경우에 병과하도록 하고 있다(동조 제2항). 또 학대행위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수감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동조 제3항).

내용을 다양화하는 한편,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이나 교육을 사건 초기부터 병행할 수 있고, 수사 단계에서 ‘친권 행사의 제한 및 정지’가 가능함으로써 피해아동을 부당한 친권이나 후견권의 영향으로부터 조기에 분리하여 추가 학대피해를 차단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4) 피해자변호사제도의 도입

아동학대범죄처벌법에서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한하여 인정하였던 피해자변호사제도를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자에 대해서까지 확대하고 있다(제16조). 피해자변호사제도는 피해아동에 대한 법적 부조를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는 것은 물론, 형사절차에 있어서 피해아동의 권익보호와 권리 실현에 유익하게 활용되고 있다²⁾.

5) 아동학대사건처리절차에 있어서 특례의 마련

(1) 검사의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도입

아동학대범죄처벌법에서는 검사가 아동학대범죄를 수사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 치료 또는 교육 받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할 수 있다. 이때 검사는 조건부 기소유예를 결정함에 있어서 1.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2.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3. 학대행위자의 성행(性行) 및 개선 가능성, 4. 원가정보호의 필요성, 5. 피해아동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의사 등의 사유를 고려하여야 한다(제26조).

(2)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

아동학대범죄처벌법에서는 검사가 아동학대범죄로서 조건부 기소유예사유를 고려하여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27조). 아동학대범죄가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될 경우 사건을 송치받은 관할법원은 학대행위자에게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부과하게 된다(제36조 제1항). 이때 보호처분의 내용은 가정폭력범죄처벌법(제40조 제1항)의 보호처분의 내용을 참고로 하여 아동학대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병과할 수 있으며(제36조 제2항), 변경도 가능하다(제40조).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학대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제41조).

6) 피해아동보호명령 및 보조인 제도의 도입

(1) 피해아동보호명령과 임시보호명령

아동학대범죄처벌법에서는 판사는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47조) 이것은 가정폭력범죄처벌법의 피해자보호명령제도(제55조 제1항)를 그대로 도입한 것으로서 판사가 직권으로도 명령할 수 있으며, 그 청구권자를 대폭 확대하고, 피해자가 아동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보호명령의 내용을 다양화하고 있다.

한편, 관할 법원의 판사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의

²⁾ 2014년 9월 29일부터 2015년 8월 31일까지의 11개월 간 신청접수된 아동학대범죄사건 전체 912건 중 911건에서 피해자변호사가 선정되었다(법무부자료 참조).

청구가 있는 경우에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임시로 보호명령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제52조 제1항). 이를 임시보호명령이라고 한다. 임시보호명령의 기간은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결정 시까지로 하되, 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동조 제2항).

(2) 보조인제도의 도입

아동학대범죄처벌법에서는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는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에 대하여 각자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과 그 기관장 및 피해자 변호사는 보조인이 될 수 있다(제48조). 또 피해아동의 경우 1. 피해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2.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판사가 보조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원의 직권 또는 피해아동 또는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직계친족·형제자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과 그 기관장의 신청이 있으면 변호사를 학대행위자의 보조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제49조 제1항). 학대행위자가 형소법상 국선변호인 선정대상(제33조 제1항)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사를 학대행위자의 보조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동조 제2항)

7) 벌칙상 특칙

아동학대범죄처벌법에서는 아동학대범죄사건

의 처리에 있어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참여와 권한을 강화하는 한편, 이들에 대한 책임과 의무도 강화하였다. 즉, 동법에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직원 및 진술조력인은 「형법」상 뇌물에 관한 죄(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한편(제64조), 보조인, 진술조력인,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과 그 기관장, 상담소 등에 근무하는 상담원과 그 기관장 및 아동학대신고의무자(제10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사람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을 포함한다)가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제62조).

5. 맺음말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이유로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 강조되고 있는 현실에서 아동학대범죄처벌법의 제정·시행에 따라 종래 아동훈육으로 인식되던 아동학대를 범죄로 인정하고, 아동학대범죄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가능하게 하는 한편, 피해아동의 권익실현과 보호를 위한 제도를 강화한 것은 아동학대의 방지와 피해아동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보면 진전된 조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동법의 입법취지가 충분히 실현될 수 있도록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신고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고,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현장개입과 조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검사와 법원은 아동학대범죄사건을 가급적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함으로써 형사처벌 보다는

원가정보보호의 요청에 부응하고, 학대행위자의 성행교정을 통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 요구된다. 나아가 아동학대범죄사건의 처리절차에 있어서도 피해아동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사법경찰관리, 검사 및 법원, 나아가 행정기관의 장에 이르기까지 등, 관련기관 간에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아동학대방지와 피해아동의 보호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강동욱·문영희(2011), 아동학대 - 법과 제도, 청목출판사

강동욱(2014), “아동학대행위자의 처벌 및 이에 관한 법제의 검토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포함하여 -”, 「법학논총」 제21집 제1호,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강동욱(201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비판적 검토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 「법학논총」 제38권 제2호,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강동욱(2014), “한국에 있어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리절차에 관한 고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소년보호연구」 제26호, 한국소년정책학회

강동욱(201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해설”, 「아동보호연구」 창간호(제1권 제1호), 한국아동보호학회